



## 일본의 소비세 인상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논란

최 원 선임연구원

■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소비세가 인상되어 민간소비 위축에 따른 일본 경제의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2012년 8월 「소비증세법」을 제정하여 2014년 4월 1일부터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였으며, 2015년 10월에는 8%에서 10%로 추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 1997년 4월 소비세가 3%에서 5%로 인상된 이후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 경제는 장기간 저성장을 경험하였음.
- 아베 정부는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금융완화정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가 동시에 나타나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소비세가 인상되어 상품가격이 상승하면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생산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1997년 경험한 경기침체 재현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

■ 소비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보장비 증가로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추정된 2013년 기준 일본 정부의 국가채무 수준은 GDP 대비 약 243.5%<sup>1)</sup>로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기초연금,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세수입은 이러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재정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고령화 등으로 늘어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논의 방안의 하나로 소비세 인상이 시행되었음.

1)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012년 기준으로 발표된 추정치를 참고함.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비세 인상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가능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음.

- 소비세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14년 약 5조 엔, 2015년 약 8조 엔, 2016년 약 10조 엔 가량의 세수입 증가가 기대되며, 대부분 사회보장비 재원으로 활용될 것임.
- 가쿠슈인 대학교의 스즈키 와타루 교수는 매년 3조 엔 가량의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 증가 속도를 10조 엔 가량의 늘어난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함.<sup>2)</sup>
  - 사회보장비 요율(social insurance premium)은 2000년 이후 거의 유사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사회보장혜택은 매년 약 3조 엔 가량 증가하고 고령화로 이와 같은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함.
- 또한, 스즈키 와타루 교수는 정부의 인상된 세수입을 감안하더라도 기초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2040년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함.

■ 일본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의 사회보장비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복지혜택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의료비, 기초연금 보험료, 그리고 요양보험료 등이 인상되고 기초연금 지급액, 아동수당 등 일부 복지혜택은 줄어든다고 보도함.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초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기초연금의 지급개시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최근 빠른 고령화로 4대 연기금에 대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늘어난 복지수요 충당을 위하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고령인구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의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요율 인상과 수급권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형평성에 기초한 사회계층 간 또는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Suzuki Wataru(2013, 10, 29), "Can pension, medical care and nursing care insurance be sustained?", Weekly Economist, pp. 87~89.

- 공공부문만으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 충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부문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아시아신문, 매일경제 등)